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
반전 운동에 대해 말하다

8~11면

질베르 아슈카르에 대한
알렉스 칼리니코스의 재반박
우크라이나와 반제국주의

4~5면

푸틴은
모든 걸 좌락펴락하는
전제군주인가?

6~7면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13면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16면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다

관련 기사 8~11면



러시아의 추악한 부차 대학살을 확산에 이용하지 말라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전 세계가 목서리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 부차 시(市)의 거리에 수많은 시신이 나뒹굴었다. 몇몇은 손이 묶인 채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 군대가 떠난 자리에 남은 부패한 시신, 불에 탄 자동차, 포격 당한 건물 등의 참상을 상세히 나열했다. 러시아 군은 중요한 돈바스 지방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전력을 강화하려고 북부에서 철수한 듯하다.

키예프(키이우)에서 15마일 떨어진 부차의 시장은 280명이 묻힌 집단 매장지가 있다고 전했다. 부차 주민인 할리나 토우카치는 3월 5일 피난을 가다가 침공군에 의해 남편 올레그를 잃었다.

그녀는 남편과 차를 타고 피난을 가던 길에 러시아 군 장갑차가 쏜 총에 맞았다고 <옵서버>지에 전했다. “뭔가가 오른쪽 어깨에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총알이었죠. 남편을 밀쳐서 차에서 내리게 하려 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대로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같은 피난민 행렬 속에서 두 아이를



참상 포격당한 키예프(키이우)의 주거 시설. 확산은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낳을 것이다

데리고 가던 젊은 엄마도 기관총 사격으로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의 한 사례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참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확산의 필요성을 선전할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확산이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낳을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서방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기를 서둘러 제공하게 하려고 압력을 넣고 있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이렇

게 밝혔다.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대가를 무릅쓰더라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무기요, 둘째도 무기고, 셋째도 무기다.”

이런 만행은 러시아 군만의 특징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충돌의 필연적 결과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일이기도 하다. 미국이 베트남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프랑스가 알제리

에서 저지른 일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세력이 자신이 억압하려는 인민의 저항을 분쇄하고 그들을 위협할 때 동원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같은 위선자들은 전쟁의 현실에 짐짓 놀라는 체하며 분노를 표할 것이다.

보리스 존슨이 악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을 지지하면서, 그와 비슷한 전술을 펴는 푸틴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정말이지 저열한 위선이다.

예멘은 특별히 참혹한 사례다. 영국·미국의 지원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군은 예멘에서 민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폭격을 퍼부었다. 무장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예멘인 1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존슨 같은 자들은 인간 생명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이익에 따라 러시아의 범죄를 규탄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이 지속되고 나토가 확산 위협을 계속 키운다면 부차에서 벌어진 참상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미래가 될 것이다.

사라 베이츠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9호 / 번역 이원웅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북아프리카에서 기아와 저항을 낳다

4월 2일부터 이슬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달인 라마단 단식 기간이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들은 낮 시간에 단식을 하며 배고픔을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나누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해가 지면 가족끼리 모여 앉아 하루의 단식을 끝내고 음식을 즐긴다. 한국의 명절 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올해 라마단은 예년과 다른 풍경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 수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전 세계 밀 수출에서 러시아는 18퍼센트를, 우크라이나는 8퍼센트를 차지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와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이 막히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탁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필수 식료품인 밀과 식용유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예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 양이 크게 줄었다.

우크라이나산 밀이 전체 수입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레바논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지난 한 달 동안 14퍼센트나 올랐다. 주식인 빵의 경우 27퍼센트, 식용유는 무려 83퍼센트가 올랐다.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뭄에 시달려 곡물 재배나 목축업이 쇠락해 왔다. 이곳에서도 식용유 가격이 일주일 새 두 배가 뛰었

다. 밀과 식용유의 100퍼센트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중동 최대 인구 대국인 이집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집트는 밀 수입의 70퍼센트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의존해 왔는데, 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전체 밀 수입량의 절반 가량이다. 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식량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집트의 노동계급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000만 명 가량이 정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빵에 의존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빵은 아랍어로 ‘에이쉬’, 말 그대로 “삶”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정권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제국주의 간 충돌이 일으킨

폭풍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하며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 세계의 가난한 민중과 노동계급에게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위기와 고통은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이라크, 수단, 스리랑카 등에서는 식료품, 기름 등의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쓴 아랍 혁명의 배경에도 물가 인상이 있었다.

이 지역의 지배자들은 민중의 반란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물가 인상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아 보인다.

박이량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의 위상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자본주의의 모든 기구들을 시험대에 올렸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 과정을 가속시키기도 했다. 현재 널리 논의되는 쟁점 하나는 전쟁이 미국 달러의 우위를 약화시킬 것인지를이다. 이런 물음은 경제사가 애덤 투즈가 말한 “미래 지향적 금융 픽션”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했다.

언뜻 보기에 그런 추측은 기이해 보일 수 있다.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은 러시아를 최대한 타격하려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신의 막대한 외화 보유액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달러가 약화될 것이라는 추측은 바로 이런 금융 제재에 대한 대응을 근거로 한다. 첫째, 미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들을 압박하는 데서 제재를 갈수록 더 많이 활용해 왔다. 이번 전쟁 전에도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미 1만 1000개 단체·개인에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이런 제재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자 달러의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런 대안이 되고자 오랫동안 공공연히 애써 왔다.

둘째, 제재를 우회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그런 대안을 현실화하는 데 이

바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경제적·군사적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의 대중(對中) 석유 수출이 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늘어나는 무역은 자연히 중국 통화인 위안화로 이뤄질 것이다. 이는 국제 통화 체계에서 위안화가 더 큰 구실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들이 말하는 “달러 우위의 조용한 감소”에 관한 보고서를 막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들의 외화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71퍼센트에서 2021년 59퍼센트로 줄었음을 보여준다.

비축 통화

그러나 달러 비중 축소의 혜택이 주로 위안화에 돌아가지는 않았다. 위안화 외에도 다른 “비전통적인 비축 통화”들이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달러화, 한국의 원화, 스웨덴의 크로나화가 두드러지는 사례다.

투즈가 지적하듯, 이런 통화들은 모두 그가 말한 미국의 “금융 안보 체제”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런 통화들을 발행하는 중앙은행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사회[이하 연준 —역자]와 연계돼 있다. 둘을 잇는 끈은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생겨난 통화 스와프망이다. 이 망을 통해 연준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금융 패닉이 벌어지면 이 중앙은행들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투즈의 표현을 빌리면 달러 체계의 “외부 버팀목” 구실을 한다.

통화 스와프망은 오늘날 달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오늘날 은행과 산업·상업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의 차입에 의존해 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 자금 시장은 주로 달러로 돌아간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 자산인 미국 재무부 채권[미국 국채 —역자]을 공급하는 국가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경제가 추락했을 때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즉 미국 국채 가격조차 하락했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금융 시장이 얼어붙으면 연준이 개입해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위안화로 된 국제 차입이 늘어났다. 이는 중국이 세

계 무역에서 하는 커다란 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국제 금융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규제해 왔다.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위안화 시장이 달러 시장의 진정한 경쟁자가 되려면 자본이 훨씬 쉽게 중국을 드나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일정 정도 조각나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위안화로 이뤄지는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이 득이 된다. 단지 러시아 같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제재가 자신을 겨냥할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파편화가 경제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IMF 보고서의 공저자인 경제사가 배리 아이켄그린은 다수의 비축 통화가 있었던 과거에도 세계 경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갔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런데 달러 우위의 시대가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그랬듯 미국이 유럽연합의 협조에 기댈 수 있는 한 달러 우위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적 경쟁이 벌어지지만 어떤 제국은 다른 제국보다 더 강력한 시기를 살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9호 번역 이원웅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자신의 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둘러싼 논쟁’(본지 410호)에 대한 레바논계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런던대 교수인 질베르 아슈카르의 반론을 재반박한 것이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덧붙인 것이다.

제 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둘러싼 논쟁’에 반응해 줘서 기쁩니다. 제가 그 글을 쓴 주된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관해 당신이 쓴 글들을 반박하는 데에 있지 않았고, 지금의 참상을 이해하는 데서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당신이 쓴 글의 일부를 인용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은 급진 좌파들이 보이는 잘못된 경향, 즉 러시아 제국주의와 우크라이나의 쟁투에만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 나토의 구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친구이자 동지로서, 서로를 모욕하거나 서로의 주장을 잘못 전하지 않으면서 생산적인 의견 교환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도 견해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캘리니코스는 자신과 여러 해 동안 긴밀하게 협력해 온 영국 반전 운동 내에서 상당한 일부가 받아들이는 만연한 신(新) 진영논리”를 공유한다고 비판하신 것은 딱히 동지적이지도, 정확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

일부 좌파들이 받아들이는 ‘진영논리’는 계급투쟁을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에 사실상 종속시키는 입장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쪽 강대국 블록은 ‘반동적’이고 그에 맞선 반대쪽 강대국 블록은 ‘진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영논리는 냉전기에 생겨난 것이죠. 제가 진영론자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비판입니다. 토니 클리프는 냉전의 양대 진영 모두를 착취적 제국주의 블록으로 보고, “워싱턴[미국]도 모스크바[소련]도 아닌 국제 사회주의”라는 기치에 따라 우리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을 창립했습니다.

진영논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아사드



질베르 아슈카르에 대한 재반박 우크라이나와 반제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부·동부 유럽에서 나토가 한 구실을 모두 규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상당수 좌파는 마치 “나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경향’에 속해 있는 것 같다.

의 살인 정권을 지지하거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옹호한 것이 이와 연관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노동자당은 두 사례 모두에서 그런 입장에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신(新) 진영논리”에 대해 제가 발표한 비판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파분한 지면 낭비일 것입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당신은 국제사회주의경향이 아사드 정권에 맞선 시리아 혁명을 굳게 지지했고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의 우리 동지들이 그 혁명에 동참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 전쟁저지연합 지도부가 두 사례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우리는 전쟁저지연합을 계속 지지하면서, 이견

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전쟁저지연합 지도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부·동부 유럽에서 나토가 한 구실을 모두 규탄하고 있죠. 제가 “신(新) 진영논리”를 펴고 있다는 비판은 철회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견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에 방영된 영국 시트콤 “폴티 타워스”의 한 유명한 에피소드는 독일인 관광객들에게 “전쟁’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것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현재 상당수 좌파는 마치 “나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런 입장에 정교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삼각 관계

당신은 현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간 세계적 경쟁 체제라는 그것의 성격에 관해 당신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박사모를 쓰고 가르치려는 듯이 설명한다”고 불평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제 글은 당신을 향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럼요, 당신은 제국주의의 역사와 현 단계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전략에 1998년 《뉴 레프트 리뷰》에 기고한 훌륭한 글이 특히 기억에 납니다. 그 글의 제목은 “전략적 삼각 관계 — 미국, 러시아, 중국”이었죠. 지금도 매우 유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최근 우크라이나에 관해 쓴 글들에서는 거기에 담긴 분석이 거의 실종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에 관해 당신이 최초로 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급진적 반제국주의 입장에 관한 메모”입니다. 이 글은 나토 확장 문제에 딱 한 문장만을 할애합니다.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쟁투에서 좌파가 해야 할 일을 다룹니다. 제가 앞서 비판한 다른 글에서 당신은 이 전쟁이 국민 방위 전쟁이면서도 제국주의간 전쟁이라는 점을 부정함으로써 이러한 강조점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하는 제국주의가 전쟁하는 당사자를 각각 지원한다고 해서 그 전쟁을 제국주의간 전쟁이라 부른다면, 이 시대의 모든 전쟁이 제국주의간 전쟁일 것이다. 왜냐

하면 경쟁하는 제국주의 중 한 쪽이 전쟁의 한 편을 지원하면 상대편 제국주의가 다른 편을 지원하리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간 전쟁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두 강대국들이 대리전이 아니라 직접 전쟁을 벌이면서 상대의 영토와 (신)식민지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은 정확히 그런 사례였다. 레닌이 즐겨 쓴 표현처럼, 제국주의 간 전쟁은 양측 모두의 '강탈전'이다."

이런 정의, 즉 양측 모두가 상대의 영토를 점령하려 해야만 제국주의간 전쟁이라는 규정은 심지어 제2차세계대전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영국·프랑스 제국주의의 관심사는 독일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버겁게 유지하고 있던 각자의 제국을 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도 영국·프랑스 영토에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노렸던 것은 동유럽과 소련이었죠.

제국주의 대리전

대리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제국주의간 전쟁 규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1950~1953년의 한국전쟁은 클리프가 당시에 주장했듯이 제국주의간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이 중국·북한을 앞세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벌인 대리전이었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남한 침공과 한반도 재통일에 열의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이 그런 김일성을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부동항을 확보하고, 머뭇거리던 마오쩌둥을 소련 블록 편으로 확실하게 묶어 두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런 사례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쟁을 추동한 것은 [베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국주의 대리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토의 제재와 무기 지원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3월 6일 런던 반전 시위

남] 공산당이 이끈 민족 해방 투쟁이었습니다. 이 투쟁은 프랑스·일본 제국주의와 잇달아 대결한 뒤 미국 제국주의와도 대결했죠. 소련의 상당한 군사적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련은 어느 모로 보나 전쟁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에는 이 전쟁이 미국과의 '데탕트'에 지장을 줄까 봐 걱정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도 이런 구체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의식은 분명 굳건하고, 침공 때문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가 매우 능동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당신 자신도 "무익한 가정"이라고 인정하면서 레닌에게서 인용한 가상의 상황, 즉 "국제사회"가 [다른 제국주의적 목적은 없이 오직] 독일의 벨기에 침공을 되돌리려 전쟁에 나선다는 상황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당신이 말한 "전략적 삼각관계"를 이루는 나머지 두 국가, 즉 중국·러시아와의 장기적 투쟁을 벌이려는 목적에서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과의 동맹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신은 애써 부정하지만, 많은 중요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평가 에드워드 루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인도·베트남·이라크·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5개국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여기에 러시아를 더하면 절반을 넘는다."

3월 24일 바이든이 나토 정상 회담에서 재확인시켜 줬듯이, 서방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에 가담해 왔고, 현재 보급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방의 정보기관, 군사고문단이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서방의 구실은 군사적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지도 말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도 말자는 기이한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제재가 실제로 하는 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당신이 말한 "치명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직접 교전은 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세계 무역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사용을

차단하고, 유럽의 러시아 석유·가스의 존도를 줄임으로써 러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려 합니다.

니콜라스 멀더 뉴욕 코넬대학교 교수는 제재의 역사를 연구한 탁월한 신간 저서에서 제1차세계대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 가한 봉쇄를 살핀 후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 제재를 흔히들 전쟁보다 덜 유해한 대체 수단으로 여긴다. 하지만 전간기[제1차세계대전 종전 후 ~ 제2차세계대전 발발 전]를 살던 사람들에게 제재라는 경제적 무기는 전면전의 본질 그 자체였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도 서방의 금융 제재를 정확히 그렇게 인식하고 핵 전력 경계 태세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자기에게 유리한 때 얼마든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분명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은, 현 상황이 제국주의간 대리전인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면 국민 방위 전쟁이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적 권리를 지지하면서도, 제국주의간 확전의 "치명적 소용돌이"를 부채질할 조처 일체(제재와 나토의 무기 지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에 반대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가 남긴 국제주의 전통은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심화시키는 세 갈래의 제국주의 경쟁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준호



한국전쟁은 소련이 중국·북한을 앞세워 미국과 싸운 대리전이었고, 또한 양대 제국주의 간 충돌이었다

푸틴은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전제군주인가?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지배 체제의 잔혹함이 블라디미르 푸틴 한 사람의 탓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의 살벌한 성품이나 스스로를 신과 동일시하는 신(神) 콤플렉스, 어떤 정신 질환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것이라고 많은 공을 들여 설명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단순했더라면! 그러나 푸틴의 이야기는 러시아와 14개 공화국이 옛 소련을 이루고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은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지배계급인 국가 관료가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계급 대중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회였다. 그런 착취 덕에 소련은 세계적 군사 강국이 됐다. 그러나 1980년대에 소련은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빠진다.

사태의 귀추를 감지한 일부 관료는 소련이 세계 자본주의에 통합되고 자유 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국가보안위원회(KGB)의 비밀 경찰이었던 푸틴도 그런 인물의 하나였다.

1990년에 푸틴은 새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아나톨리 솅차크 밑에서 일했다. 푸틴과 솅차크는 새로운 자유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려 애썼다.

1991년 8월 소련 관료와 KGB의 보수적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구질서를 사수하려는 최후의 시도였다.

러시아(당시에는 소련의 일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쿠데타에 맞선 대중의 지도자를 자처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솅차크와 푸틴은 쿠데타 진압을 돕는 데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구질서의 실패는 소련의 해체를 가속시켰다. 소련 붕괴로 러시아에서 새 시대가 열리리라는 환호가 있었지만 지배층이 딱히 교체된 것은 아니었다.

계결음

옛 공산당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옛 소련 관료 출신 인사들은 이미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챙겼다.

대규모 민영화가 추진되던 시기를 거치며 이른바 “올리가르히”, 즉 엄청나게 부유하고 정치권과 유착한 기업가 집단이 형성됐다.

이 “무법천지” 자본주의에서 소수 올리가르히는 공분을 살 만큼 터무니없이 많은 부를 쌓았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촉발하기도 했다. 산업 생산이 50퍼센트 감소하고, 생활 수준이 폭락하고, 임금이 체불됐다. 이는 러시아 국가와 군산복합체를 약화시켜 러시아가 해외에서 제국주의적 이익을 관철시킬 능력을 약화시켰다. 1993년이 되자 자유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옐친과 두마[연방의회] 의원들은 심각하게 갈등했다.



2000년 G8 회담에 참가한 푸틴(오른쪽에서 두 번째), 집권 초 푸틴은 서방 정치인들의 환대를 받았다

옐친은 탱크를 투입해 의회를 포격했다. 그 후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개헌을 강행했다. 그 새 헌법의 초안은 푸틴의 스승 솅차크가 작성했다.

이런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은 1990년대의 새로운 사적 이윤 추구 모델을 수호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푸틴이 부상해 더 광범한 러시아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했다.

1999년이 되면 옐친은 지배계급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다. 옐친은 사임했고 당시 총리였던 푸틴이 그의 후임자가 됐다.

이후 푸틴은 러시아의 신생 자본가 계급 위에 군림한 “독재자”로 묘사됐다. 그러나 러시아 국가와 올리가르히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실상에 더 가깝다.

푸틴은 제한적이거나 세금을 강제하는 등 올리가르히의 전횡에 일부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리가르히는 푸틴의 뜻에 기꺼이 따르려 했다. 그 대가로 올리가르히는 잘 조직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봤다.

올리가르히의 이윤 추구 방식은 보호받았고 더 고착화됐다.

러시아 국가는 경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올리가르히는 국가의 자산을 약탈해서 부를 쌓아 놓고서는 후발 주자들에게서 자신들의 시장 지분을 확실히 지키려 했다.

국가와 자본의 상호 의존

그 결과 신생 민간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고 구래의 국유 산업과 민영화된 기업들이 경제를 계속 지배했다. 사실 국영 석유·가스 기업 로즈네프와 가스프롬조차도 상업적으로 운영됐고 민간 지분이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도 영국의 석유·가스 대기업 BP는 로즈네프 지분 20퍼센트를 보유하고 임원진에 이사를 두고 있었다.

[푸틴 집권 전반기에] 러시아 국가는 국영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에 계속 팔았다. 2011년에 러시아는 경제에서 국가의 “과도한 존재감”을 줄이고자 석유 부문 등에서 1조 루블 규모의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다. 물론 이런 추세는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뒤집힐 수도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 러시아 국가는 미국·영국·유럽연합이 밀어붙인 자유 시장 정책을 따랐다. 2001년에 러시아는 가장 가난한 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역진적 균일세를 도입하고, 학교에 일종의 민간자본투자사업을 도입했다.

집권 초 푸틴이 서방 정치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것이 놀랍지 않은 까닭이다. 당시에는 서방과 러시아의 지배자들이 힘을 합쳐 각자의 부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2003년 국민 자격으로 영국을 방문한 푸틴은 버킹엄 궁전까지 가면서 기병





2011년 12월 24일 모스크바 반푸틴 시위. 그해 12월 두마(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에 항의해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대의 호위를 받았고, 버킹엄 궁전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BP의 이권을 다질 중요한 석유 협상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BP 경영자였던 토니 헤이워드 는 이렇게 말했다. “지정학적인 상황에 딱 어울리는 협상이었다. 2000년대 내 내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전에 없이 가 까워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뚜렷했다.” 그런 기대는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다.

1991년 이후 러시아는 이른바 “가까운 외국”들, 즉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재확립하려 해 왔다.

러시아 국가가 약화된 상황에서 열친은 일련의 분리주의적, 민족 간 충돌을 부추겨서 인접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의지해서 영향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막상 체첸이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체첸을 굴복시키기 위해 두 차례나 잔혹한 전쟁을 벌여야 했다. 열친은 체첸의 저항에 밀려 1994~1996년 제1차 체첸 전쟁에서 패했고, 러시아 거리에서 일어

난 항의 운동에도 패배했다. 그러나 1999~2000년에 더 유리한 고지에 있던 푸틴은 체첸의 저항을 진압했다.

푸틴의 군사적 승리와 2000년대의 국제 유가 급등은 정권 안정의 발판이 됐다. 덕분에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재건하고 석유와 가스를 이용해 힘을 키울 수 있었다.

한편, 미국·나토·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가까운 외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애써 왔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 경쟁이 첨예해졌다.

최초의 중요한 충돌은 2008년 조지아에서 촉발됐다. 당시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분리·독립하려 한 두 지역을 [조지아의 공격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해서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 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기울 것으로 보이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지방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했다.

이 공격은 그저 푸틴과 그를 추종하

는 소수 장성들과 정보기관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국가가 제국주의, 즉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계적 체제의 논리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였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전면전도 마찬가지다.

제국주의 경쟁 체제

러시아는 석유·가스·석탄의 주요 수출국이다. 또, 여러 곡물과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도 꼽힌다.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600만 명에 달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러시아의 절반도 안 되고, 내세울 천연 자원도 훨씬 적은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가 러시아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 보좌관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이렇게 말했다. “석유·가스를 빼면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우리만큼 하찮다. 러시아는 커다란 주유소나 다름없다.”

이번 침공은 러시아 국가가 처한 경

쟁 압력에서 비롯한 것이다.

2015년 민스크 “평화 프로세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충돌을 일시 중단시켰지만, 서방과 러시아의 경쟁은 계속됐다. 그리고 서방의 압도적 힘 앞에서 러시아는 수세에 몰렸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가까운 외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잇달아 항쟁이 분출했다. 이 항쟁들은 대중 항쟁이었지만, 서구 열강은 거기에서 득을 보려 한다.

러시아 국가 — 단지 푸틴만이 아니라 — 는 러시아가 아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인접국에 각인시키고 싶어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러시아 국가와 러시아 지배계급 전체에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푸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 그의 뜻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

푸틴은 대(大)러시아 국수주의를 이용해 지지를 구축해 왔는데, 지금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분노가 분출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1년~2012년에는 선거 부정에 항의해, 2018년에는 연금 개악에 항의해, 더 근래에는 2021년에도 시위가 분출했다.

이런 시위의 근저에는 노동자들 사이의 더 광범한 항의 정서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때와 비슷한 반정부적 정서가 다시 폭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라 베이츠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98호 / 번역 오수민

추천 책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혁명부터 스탈린 체제를 거쳐
푸틴까지

마이크 헤인스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520쪽, 22,000원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 반전 운동에 대해 말하다



이 기사는 '러시아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3월 3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로잘리(러시아 사회주의자, 상단 사진)의 발제와 정리발언을 기사화한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 동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돼 있으니,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보기



서방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비극이다. 3월 우크라이나 하리코프(하르키우)

서방과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적 충돌

크게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은 서방과 러시아가 자본주의 시장을 둘러싸고 벌이는 제국주의적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래로, 제국주의적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배를 놓고 서로 경쟁해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정부가 친서방 정부로, 친서방 정부가 다시 친러 정부로 교체되길 거듭했습니다.

러시아는 "접경국들," 즉 옛 소련 소속 국가들에 대한 지배 회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끈질기게 동진(東進)해 자신의 적수인 러시아를 압박해 왔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성향의 당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에 반대해 대중 시위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야누코비치가 퇴진하고] 서방은 친서방 정부를 세웠습니다. 먼저 페트로 포로셴코가, 그 뒤를 이어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현 우크라이나 대통령 — 역자]가 집권했습니다.

이 정부들은 서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개방, 노동 규제 완화, 노동자 권리와 임금에 대한 공격, 공공요금 인상 등.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경제는 점차 악화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같은 중요한 반(半)식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루한스크 지방에 "인민공화국"이라는 꼭두

각시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 역시 사실상 군사 점령이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그 후 몇 년 동안 러시아 내에서 애국주의 열풍을 일으키고 노동계급의 눈을 가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푸틴이 대외 정책에서 거둔 '성공'을 지지하면서, 국내에서의 심각한 노동개혁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보아넘겼습니다. 그런 개혁의 사례로 2018년 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이 '개혁'으로 남녀 노동자들의 연금



리투아니아의 다국적 나토 전투단

지급 개시 연령이 5년 늦춰졌습니다.

올해 2월에 시작된 전쟁은 2014년 사건들의 직접적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러시아 지배계급은 꼭 필요한 정치·경제 개혁을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부 지지율을 높이고 압박한 사회적 위기를 해소할 "전쟁에서의 작은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는 데에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벌였고,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에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도 공포를 부추겼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항의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쟁에 얽힌 노림수는 이밖에도 또 있습니다. 러시아 지배계급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과 반전 운동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진격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판단해 보건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토방위군 전투원으로 꾸준히 자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 은퇴한 연금 수령자들도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협상 이후 러시아는 일부 병력을 키예프(키이우)·체르니고프(체르니히우)에서 철수시켜 돈바스 지방으로 옮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돈바스 지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순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키예프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선방한 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정규군 — 역재과 국토방위군 부대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전선을 사수하려 애쓰고 있으며 반격에 나서기도 합니다. 매우 유명한 항전이 벌어진 마리우폴시(市)에는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전 운동

현재 러시아가 대외 정책에서 맞닥뜨린 난관은 러시아 사회에 역풍을 낳고 [정부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침략국인 러시아 내의 반전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전 운동은 푸틴의 억압 기구에 의해 개전 후 약 한 달 만에 분쇄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 경찰의 구타와 고문은 러시아에서 일상이 됐습니다.

자유주의 야당 세력의 기층 활동가들이 반전 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지도자들은 기층 활동가들이 산발적이고 고립된 행진을 벌이는 데에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만들었고, 시위를 조직적으로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층 활동가들이 경찰 방패와 싸우는 데에만 모든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쏟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을 모든 시위들은 광장에 모인 개인들이나 소규모 조직들이 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시위들의 요구는 단 하나, 전쟁 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나토 소속 국가들도 군사화하고 있다. 3월 25일 노르웨이의 나토군을 방문한 나토 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푸틴 한 명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푸틴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단순한 설명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레닌 동지는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화를!”이라는 슬로건은 틀렸다. 우리의 슬로건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여야 한다.

“이 전환이 매우 지난하고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 전환을 목적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사보타주 하거나 개별적으로 그런 활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키는 대중적 선동을 — 그 대상을 ‘민간인들’로 제한하지 않고 — 벌여야 한다.”

제2인터내셔널의 길, 즉 제국주의적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좌파적’ 국수주의의 길을 거부하는 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반전 운동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위에서 사회주의적 의제를 제기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왼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시위에 참가합니다. 오늘 듣기로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선(戰線) 투입 명령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권의 반전 운동 탄압은 대중 시위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준다

러시아의 반전 운동을 살펴봤으니, 이제 반동적 푸틴 정권이 반전 운동과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탄압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1만 800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들이 구금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 다. 또, 많은 좌파 활동가들,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문화인들이 지금도 구금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온갖 억압적 법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는 언론 매체들이 대중에게 현재 상황을 공정하게 보도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공식 입장은 대개 거짓말이기 때문 이죠.

정부는 “러시아군을 꺾기”하거나 전쟁을 규탄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새 수단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총돌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만으

로도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른바 “외국 및 해외·국제 조직을 도운” 사람들에게 “조국 반역죄”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12~20년 형을 살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극단주의 조직의 매체로 지목돼 러시아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반전 시위 참가자들을 색출·처벌하려고 안면 인식 기술이 장착된 감시카메라 등 온갖 첨단 기술도 동원합니다. 시위에 참가한 지 몇 주 뒤에 지하철에서 갑자기 체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대중적 반전 시위가 더 벌어지는 것을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의 러시아군의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재는 러시아 노동 대중을 겨냥한 서방의 전쟁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반전 운동의 상황과 정권의 대응을 살펴봤는데, 이제 서방의 러시아 제재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서방의 공식적 주장과 달리,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무엇보다 보통의 러시아인들을 겨냥한 제재입니다.

이미 노동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부 IT 노동자들과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은, 제재 때문에 몇몇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 중지돼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완성차 제조 공장 및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들은 해고됐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부동산 가격이 최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식품 가격, 주거비, 핵심 서비스 비용이 20~40퍼센트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곡물과 설탕을 사재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완 좋은” 몇몇 사업가들은 여러 식품의 품귀 현상을 고의로 조장하기도 합니다.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러시아 노동계급을 갈수록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푸틴은 신자유주의 전통에 충실하게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판 피노체트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피노체트는 1973년 칠레의 혁명적 대중 운동을 군부 쿠데타로 분쇄하고, 1990년까지 군사 독재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실시한 칠레 군장성 출신 독재자였다. —역자]

이는 정치적 자유는 전무하지만 사유 재산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인들을 극도로 빈곤하게 만들고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TV를 이길 수 있다”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TV를 이길 수 있다.” 이는 현 상황[빈 냉장고를 표상되는 곤궁함]에 대한 대중의 극도의 분노가 TV를 통해 흘러 나오는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거슬러 거리와 작업장에서 표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재 때문에 보통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정부·지배계급 지지로 단결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



모스크바 거주 이민자가 본지에 보내 준, 저가 곡물류 위주로 동나버린 러시아의 식료품 매대 사진

전 기구가 맹렬히 가동돼, 제재의 피해를 서방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방방곡곡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침략자 나토와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에 맞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러시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극빈층의 많은 수가 이런 선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반드시 지금의 역경을 딛고 일어나 결과적으로 득을 볼 것이라고 믿습

니다. 이런 생각이 대중을 지배자들에게 묶어 두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전히 희망도 있습니다. 이미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일부 사람들은, 더는 전쟁 초기만큼 푸틴 정권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중의 정서에 이미 내적 긴장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반전 활동가들의 최초 물결은 주로 학생·지식인으로 이뤄져 있었지만, 더 큰 물결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 물결은 사회적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전쟁에 신물이 난 병사와 보안 부대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회적 위기가 깊어지면, 더 좌파적인 시위가 벌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쟁의 타이밍과 위기의 심각성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제재로 인한 위기가 러시아 지배계급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드러지는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작은 징후는 실제로 있습니다. 예컨대, [1990년대] 러시아에서 사적 소유 자본주의와 “충격 요법”[대규모 시장화 정책의 “설계자”였]고 최근까지도 푸틴을 보좌하던 아나톨리 추바이스가 공직에서 사임하고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또, [러시아 2위의] 석유 기업 루크오일의 CEO와 이사진들, 많은 대주주들이 전쟁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모두 더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일들은 입장 표명 수준을 넘지 않지만, 위기가 극심해질수록 그 파장은 예측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든, 또 러시아 대중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우리는 서방 강대국들이 러시아 노동계급에게 가하는 이런 끔찍한 공격에 반대해야 합니다. 제재는 러시아 노동 대중을 겨냥한 일종의 전쟁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은 제재를 이용해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분노를 서방으로 돌리고 반전 정서를 약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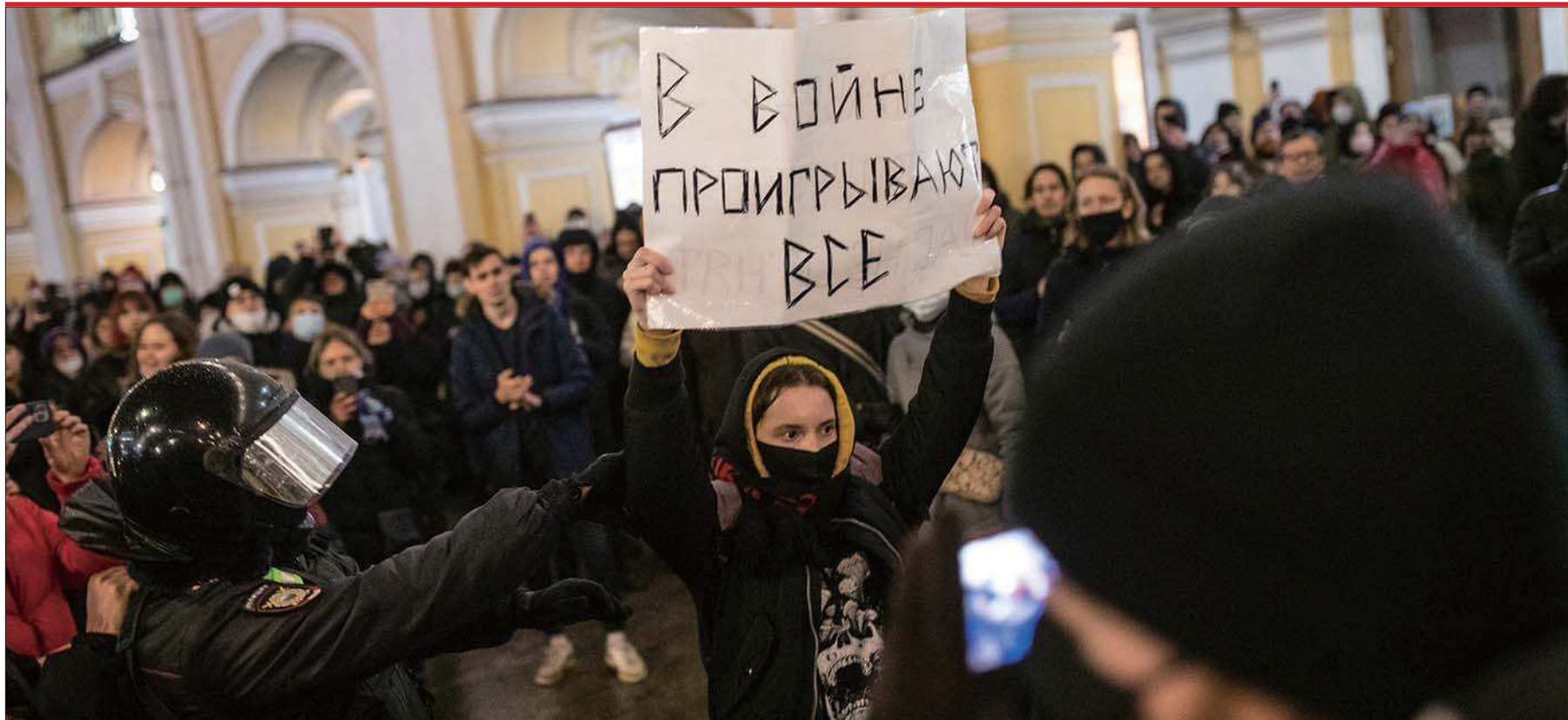


사진 출처 David Fenkel/ Mediasone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제국주의 간 충돌에 개입하는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전 시위

발제자의 정리

바이든이 푸틴 정권 교체 운운한 데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을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별 반응이 없습니다. 푸틴은 미국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고, 아직 많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 서방이 제재를 더 강화할수록 러시아인들은 서방에 대한 증오심만 더 커질 것입니다.

러시아 자유주의 세력의 규모와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러시아 반전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허비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세력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규모 있는 반정부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알렉세이 나발니입니다.

그런데 나발니는, 사람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아래로부터 조직화하고 대규모 시위를 도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가들에게 [준비가 엉성하더라도] 매일 또는 매 주말마다 경찰과 싸우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발니 측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시위에 참가하라고 촉구한 탓에 보안 당국이 익히 대비를 마치고 더 수월하게 탄압할 수도 있었죠.

그런 일련의 일들 끝에 활동가들은 보안 당국에게 미끼로 던져지는 데에, 구금·고문·폭행에 넋덜머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 활동가들은 — 영향력은 나발니 지지자들보다 훨씬 작지만 — 나발니 측에 단결해 대중 시위를 벌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발니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반전 시위는 도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산발적·소규모 시위라는 형태로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운동 “건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러시아판 ‘마йдан’ 시위*가 기적처럼 탄생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정서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항의 정서가 커지고 있는지를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소수민족들이 소규모 반전 운동을 벌이긴 하지만, 아직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예컨대 무슬람이 다수인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에서는 반전 정서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운동들은 소수민족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역 운동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예컨대 시베리아와 하바로프스크 지역에서는 시위가 꽤 여럿 벌어졌고, 반정부 정서도 꽤 큼니다. 우리는 대중의 일반적 반정부 정서를 반전 운동과 결합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야당들과 반정부 세력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지 독립 국가가 아니라는 말로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또,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

치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러시아인들 모두가 서방을 싫어하지 않느냐면서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파시스트와 나치가 들끓고 있고, 러시아는 파시스트에게서 세계를 구한 역사[제2차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동부 전선을 무너뜨린 일을 가리킴] — 역재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러시아 정부의 선전 당국은, 파시스트와 나치를 박멸하는 것이 러시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인의 60~70퍼센트가 푸틴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류 의회 정당들은 모두 침공을 지지합니다. 기회주의적인 러시아 공산당도 침공을 지지합니다. 이 이름만 공산당인 당의 대표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러시아로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메스껍기 짝이 없습니다.

침공에 반대하는 세력은 소수 좌파 활동가들과 좌파[사회주의자 포함] — 역재 지식인들,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자들 정도입니다.

결론

질문에 모두 답변한 듯하니, 결론을 짓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시무시한 세계적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곳이, 모든 나라가 전선입니다. 모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핵심 임무는 새롭게 대두하고 심화하는 제국주의 충돌에 개입하는 제국주의적 자국 정부에 맞서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전쟁 반대 전선을 넓히고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좌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부가 서방·러시아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나토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가하고, 나토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대중 선동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주적은 항상 국내에 있다”[100여 년 전, 독일 혁명가 카를 립크네히트의 말]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단결해, 노동계급에 대한 일체의 전쟁 행위를 규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 제재든 미사일 폭격이든 말입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는 반전 운동가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난민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야만 하는 러시아인 반전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이들이 정치적 망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족 억압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해방 만세! 민중에게 자유를! 제국들에게 죽음! 인터내셔널 만세!

통역 천경록

용어설명

마йдан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부패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분노를 배경으로 분출한 항의 운동이었다. 거대한 저항에 밀려 정권이 물러났지만 정치적 대안의 부재로 결국 친서방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됐다.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환영하는 집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아직도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존속과 낙태 제한이 포함된 대체 입법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혔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법적·제도적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여성들은 낙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싼 낙태 비용, 많은 병원들의 시술 거부, 낙태약이 여전히 금지된 현실 등,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극적인 일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임신 후기에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조산아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많은 언론은 “끔찍한 영아 살해” 운운했지만, 이 여성은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거부당해 이런 비극으로 내몰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낙태 현실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초기 낙태에 안전한 낙태약(미프진)도 입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었다.

게다가 정부는 안전한 낙태 정보와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낙태권 단체 ‘위민온웹’ 사이트마저 차단했다.

비극

현재 판결 후 3년 동안 낙태 권리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이제, 낙태 대체 입법 논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지게 됐다. 낙태가 첨예한 쟁점이다 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대체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뤄질 공산이 크다.

낙태 반대 세력은 윤석열의 당선과 미국에서 보수 우파의 낙태 반대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것에 크게 고무받았다.

가톨릭 교회 등 낙태 반대 세력은 4월 9일,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대행진’을 3년 만에 도심에서 개최한다. ‘낙태법 과제’와 ‘미국 반낙태 캠페인의 성과’를 다루는 연설도 예정돼 있다.

가톨릭 교회의 다수 주교들은 가톨릭 신자 의원들이 낙태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낙태 허용 주수를 6주~10주로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낙태 반대 세력은 대체 입법 과정에서 낙태 허용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낙태죄를 부활시키려 할 것이다.

아직까지 윤석열은 낙태죄 대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의 여성 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생율이 0.81명에 그쳐 미래 노동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자 지배계급의 우려가 상당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종종 낙태 단속이나 처벌 강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윤 획득에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낙태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낙태는 여성이 결정할 문제이다. 여성의 요청에 따른 낙태는 기간과 사유 등의 제한 없이 모두 합법화돼야 한다.

또, 낙태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고, 낙태약(미프진)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래야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에게 낙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4월 10일 오후 2시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의 주최로 ‘낙태권 보장’과 ‘미프진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된다.

우파 정부 하에서 낙태권 운동이 성

과를 얻으려면, 의회 내 법적 대응에 초점을 두기보다 기층의 운동을 확대하는 데 중심을 뒀야 한다.

민주당에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된다. 2020년 10월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면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이 대거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중 운동만이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이로써만 낙태권을 성취할 수 있다.

전주현

추천 소책자



[개정 증보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정진희·최미진 지음, 노동자연대, 68쪽, 3,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양효영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들을 묶어 놓고 “특정한 공통점이 있는 세대”로 규정하는 것이 맞나 하는 물음이 나온다. 사회적 구성부터 취직 여부, 정치적 경험까지 처해 있는 조건과 경험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과장님과 고등학생이 같은 청년이라는 꼴이다.

그래서 정작 MZ는 공감 못 하는 MZ 세대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대론의 범람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온다.

특정한 나이대에 공통의 시대적 경험을 하면서 공유하게 되는 감각이 있겠지만, 세대 내 차이들도 존재한다. 전자가 지배적 특징이 되려면, 커다란 역사적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MZ세대는 그런 수준의 공동 경험이 없다. ‘이대남·이대녀’도 현실의 청년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데 경제적 양극화(불평등 심화)의 시대에 청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 서민층 사람들과 소수 부유한 청년의 삶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대론을 실증적 데이터들에 기반해 논박한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도 나왔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절반 가량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다. 그래서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소한의 의식주도 충족하기 어렵다.

이런 빈곤한 현실은 금리 우대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무려 290만 명이 몰린 것으로도 잘 드러난다.

반면, 부자집 자녀들은 이런 걱정이 없다.

이런 격차를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2, 래퍼 노엘)의 개망나니 짓이다.

그는 고가 승용차를 무면허로 몰고, 음주 측정을 요청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사고를 쳤다. 장용준은 201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죄질이 이처럼 나쁜데도 그는 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구속된 뒤에도 독거실에 배정되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면, 대부분 돈도 ‘뼉’도 없는 이른바 ‘잡범’들은 과밀하고 열악한 혼거실에 수용된다.

장제원 가족은 사학 재벌 가문이다. 장용준은 3억 원 넘는 벤츠를 자기 돈으로 구매했다며 자랑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재난 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새끼들”이라고 조롱했다.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국민의힘은 특권층과 그 기득권을 이어받는 자녀들의 이익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신들이 ‘이대남’의 대변자인 양 행세하지만 말이다.

기업주들의 지지를 받는 주류 정치인들은 세대론이나 이대남·이대녀 담론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낙아채거나 희석시키기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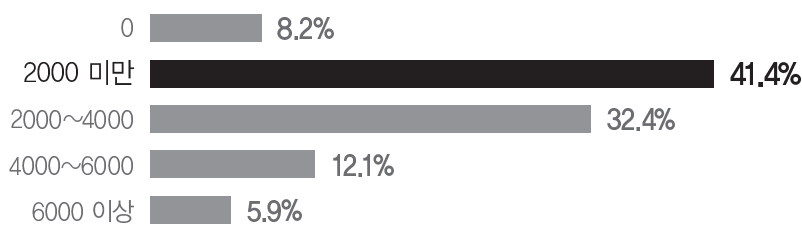
노동계급 안에서 세대와 성별 차이를 뛰어넘는 단결이 필요하다.

청년 빈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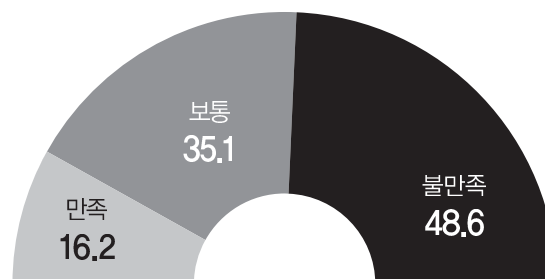
2021년 7월 26일 ~ 8월 13일, 만 19~34세 4114명 대상 조사

(자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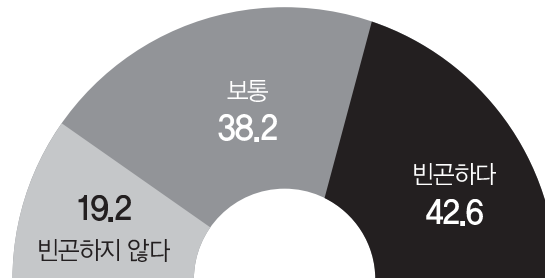
총 연간소득 (단위: 만 원)



연간소득 만족도 (단위: 퍼센트)



주관적 빈곤 인식 (단위: 퍼센트)



세대 구분은 무용한가?

1987년을 겪은 세대, 1990년대 초반 세대처럼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비슷한 성향을 드러내는 세대는 존재할 수 있다.

과거 월간 <말>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라 세대를 분석한 기사를 실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예컨대, 엄혹한 시절에 각성해 활동했던 76~79학번은 지사(志士)적 분위기가 강했다. 6월 항쟁 등을 겪은 80년대 중반 학번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 대중적이고 활발한 운동 방식을 택하면서 정치 문화

나 분위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강렬한 역사적 경험들을 함께 한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는 건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세대 내에서도 모두가 동질한 것은 아니었다. 불균등이 있었다.

<말>지에 실린 한 80년대 초반 학번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세대 역할론이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지 한 세대를 같이 살았다고 동질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그 세대 내에서 계급적·정

치적 분화도 점차 일어났다. 일부는 사업에 뛰어들어 자본가로 성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민주당으로, 또 일부는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으로 진출했다.

MZ세대론은 이런 정치적·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세대 구분이 아니다. 이 세대는 강렬한 역사적 공통의 경험이란 것이 별로 없다. 출생 시기로 구분하는 정태적 세대론은 역동적 변화 속 추이와 같은 세대 내의 격차와 불균등, 다른 세대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무익하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꼭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4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주말 아침부터 몽롱한 정신이 순간 확 깨다.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닐까 바랐다. 하지만 곧 사망 소식이 들렸다. 지난 산재 사망 이후 68일 만에 또다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재해자는 조기 출근해서 작업하다 근처 톨박스(공구함)에서 일어난 폭발로 변을 당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규명 중인데, 가스 절단기로 용접 부위를 다듬는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해자는 이 폭발로 튕겨져 나온 톨박스 철재 문에 안면부와 흉부를 맞아 순식간에 11미터나 튕겨져 나갔다. 충격이 너무 커서, 사고 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사무실에서도 폭발 소리가 들렸고 충격파로 창문이 흔들렸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인화성 물질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비했고, 화재 감시자와 관리 감독자도 없었다. 현장의 밝기 수준도 기준 미달이었다. 사측은 각종 위험 설비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관리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일작업지시서를 허위로



사고 현장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폭발 직후 11미터나 튕겨져 나갔다

작성하다 노동조합에 발각됐다.

최근 사측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연일 아우성이다. 지난해 수주 목표량을 53퍼센트나 초과 달성했을 정도로 일감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측은 늘어난 일감을 빨리 처리해 이윤을 늘리려고 혈안이다.

쥐어짜기

그런데 올해 1월 중대재해 사망으로 인해 관련 부서인 가공소조립부가 약 5주 정도 작업이 중지돼 전체 공정이 지

연됐다. 사측은 주52시간제도 발목을 잡는다고 불평한다.

더욱이 이번에 사고가 난 부서인 판넬조립부는 앞서 작업이 중지됐던 가공소조립부의 뒷 공정이다. 사측은 부족한 인력으로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이 속에서 사측은 안전 조치를 뒤흔으로 여기며, 하청 노동자를 주말에 조기 출근시켰다. 조기 출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사측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를

위험에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사측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고 있다.

노조 대의원으로서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 필자에게 하청 노동자들은 일할 때 여유가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사측이 작업 착수 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본다고 한다. 또, 얼마 전부터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는 제도를 강화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전에 신경 쓰기는 매우 어렵다.

사측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에 일어났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윤석열은안 그래도 누더기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개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측이 안전에 더욱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폭발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사측의 이윤 물이에 도전해야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직을 생각하는 현대중공업의 한 젊은 노동자가 필자에게 한 말이 있다. “이 회사는 사람이 죽잖아요.” 너무 슬픈 말이다. 더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전주공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대형 트럭 품질을 관리·검사하는 공정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을 검수·보정하다가 들려 있던 캡(운전석이 달린 차체)이 떨어져 사망했다. 캡의 무게는 자그마치 808킬로그램이나 됐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어린 세 아이의 아빠였다. 남은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재해 노동자는 검수가 본인의 담당 업무였지만, 사측의 부당한 지시로 보정 작업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한다.

재해 피해 노동자는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를 요구했었는데, 사측은 비용을 이유로 무시했다고 한다.

또한 현장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다. 캡을 떠받친 건 차량에 달린 유압 실린더가 유일했다. 이번처럼 유압

실린더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캡을 잡아 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드는 기계 장치)나 지지대, 안전 블록 등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사측의 이윤 추구가 이번 중대재해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사측은 비용을 아끼려고 인력과 안전시설의 확충을 꺼렸고, 재해 피해 노동자는 사측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

다.

그런데 윤석열은 취임도 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누더기로 통과된 법을 더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안전에 더 소홀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마음 굳게 먹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들의 이윤 물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대선을 치른 지 몇 달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억눌려 온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차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낮은 지지율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는 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우파부터 친여 성향 단체, 노동조합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윤석열 인수위가 가장 먼저 경계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노동 운동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노총(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노동자 집회를 꼭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투쟁을 자제했지만 거듭 배신당하면서 불만이 높아졌고, 새로 들어설 보수 정부가 노동 조건을 더 많이 공격할 것이 예상되므로 반감과 불안감도 클 것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이런 점을 내다보고는 일찌감치 대비하려는 것이다.



방역을 핑계로 지난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방해한 경찰

경찰 — 기존 사회를 지키는 지배자들의 ‘몽둥이’

경찰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위상이 달라진 13만 경찰 조직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권한이 커진 경찰은 그에 걸맞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당치를 대폭 키우더니, 이제 그에 걸맞은 지위 격상도 요구한 것이다.

이를 이어받아 윤석열도 경찰 강화에 적극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경찰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둘러싼 정세가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모두 심각한 다중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 기능, 즉 억압력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가 더

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은 여러 권력기관 중에서도 특히 대중의 일상 생활에 밀착해서 질서를 유지(감시)하고 집회·시위 등을 일선에서 진압하는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말(이데올로기)로 설득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의 ‘설득력’은 ‘몽둥이’의 단호함과 강력함에 달렸다.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돼 있어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의 국가는 경찰력 같은 억압적인 힘(폭력) 없이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시동이 걸린 윤석열의 경찰 강화 시도를 경계하고 그에 반대해야 한다.

상호 견제를 명분으로 계속 강화돼 온 검·경 권력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검찰개혁’ 운운이 낡은 환명을 이용해 검찰을 강화할 기회도 엿보고 있다.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집권하면 검찰 권력이 ‘복원’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 권력이 약화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종결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줬을 뿐, 집회·노동·공안·선거·대형참사 등이 포함되는 6대 주요 범죄에 대해 막강한 수사권을 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 기관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지만 검찰 권력의 코끝도 건드리지 못했다 (또는 앓았다).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혔으나, 이제 그들이 ‘죽은 권력’이 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산 권력에 충실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검찰 권력 ‘복원’이란 핵심적으로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다시 늘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과 다른 “사법개혁”이라고 말한다.

대다수 언론은 경찰과 검찰 사이의 권력 다툼을 주로 조명한다. 하지만 수사, 재판, 교정기관에 이르는 사법 절차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 개선이다. 두 권력기관의 경쟁에 끼어들어 누가 더 낫다고 하는 건 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 인권침해적 수사 예방 대책, 대검 공안부·정보경찰 폐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제한적이거나 보통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법개혁 요구는 뒷전에 밀렸다.

주류 양당과 그 정부들이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검·경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억압적 관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승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

4월 14일(목) 오후 8시

발제 **최미진** <노동자연대> 기자,
《성폭력 2차 피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저자

참가신청
bit.ly/041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